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력계통 등을 고려하여 지정되었습니다.

〈보도 주요 내용〉

‘25.4.24.(목) 조선일보는 「대선 한달여 앞두고...20조원 해상풍력 단지 지정한 산업부」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20조원이나 들여야 하고 지자체에 연간 2000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국가 송배전망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정부 재정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의 투자로 건설되는 것이며, 전남도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지자체 주도형 REC)는 준공시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지정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가 완료됨에 따른 것임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 평가위원회 평가(2월20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서면심의(3월31일 ~ 4월11일) 등 완료

아울러 현재 호남 등 일부지역에 전력계통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나, 10차 송변전설비계획(2023년 5월)에 따라, 2031년 이후부터 주요 전력망이 확충될 예정이고 현재도 이를 감안한 연계조건으로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있음. 정부와 한전은 전력망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책임자	과 장	최광준 (044-203-5380)
		담당자	사무관	최용균 (044-203-5383)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책임자	과 장	최성준 (044-203-3930)
		담당자	사무관	박성열 (044-203-3936)